

저출산시대의 충남 아동복지 현황과 과제

이재완 |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I. 서론

정부는 지난 2006년 사회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사회투자국가를 설정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의 도래와 출산율의 저하는 우리사회의 큰 위기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아동, 노인 등에 대한 돌봄노동의 사회화 및 사회적 분담에 대한 논의가 나타나고 있다. 즉, 아동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통해서 미래에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사회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아동복지와 여성친화적인 정책은 에스핑 안데르센에 의해 대표적인 사회투자 프로그램으로 강조되었다(Esping-Andersen, 2002). 사회투자전략의 상징으로 아동복지를 강조하는 이유는 아동기에 불리한 환경에서 자라 인적자본을 축적하지 못한 경우, 성인기의 실업과 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동기에 불리한 성장조건에 대해 사회적 개입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성공을 촉진하고자 한다. 아동을 단지 보호해야 할 대상이기 보다는 미래의 시민노동자로 규정하고 아동의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교육, 보육, 의료 등의 종합적인 프로그램의 제공을 주장한다(김연명, 2007). 최근 정부는 사회투자와 관련하여 아동투자사업으로 모든 아동의 평등한 출발과 잠재역량 발현을 위한 빈곤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희망스타트 프로젝트(한국형 Head Start)와 아동의 미래 가능성 제고를 위한 자산형성지원 사업인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Child Development Account)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정책은 아동기에 집중적인 인적투자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에 아동복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써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고 있지만, 해방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의 중심은 '시설보호중심의 요보호

아동에 대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과거 한국전쟁이후 요보호아동을 위한 긴급구호의 형태로 가정보호보다는 시설보호가 이루어졌다. 사실 모든 아동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 발달하기 위해서는 시설보호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인 부모와 자녀관계를 지지할 수 있는 서비스(supportive services, 전체아동을 위한 아동상담 프로그램 개발 시행)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역할에 대해 일부를 대행할 수 있는 보충적 프로그램(supplemental services)으로 영유아보육서비스, 방과후아동지도, 피학대아동보호사업, 가정조성사업, 소득유지사업 등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특히 보충적 서비스의 하나인 영유아보육사업은 지난 10년 전과 비교할 때 양적·질적으로 발전하였다. 최근 보육사업의 정책목표를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에 두고 제1차 중장기보육계획(2006-2010)인 새싹플랜, 제1회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인 새로마지플랜,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 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계획들에 담겨있는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크게 분류하면, 하나는 국공립시설의 확충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의 보육비용분담수준의 확대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공립시설 확충을 위한 여러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보육예산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김종해, 2007: 197).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보육서비스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여 '아직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없다'는 부모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의 보편적인 보육의 욕구에 대하여, 그 동안 정부의 보육정책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 대한 보육만 재정부담하는 선별주의정책을 취하여 왔다. 결국 보육을 필요로 하는 부모들에게 적절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보육의 책임을 보호자에게 돌리는 정책으로 인해 보육서비스의 공급확충에도 불구하고 보육의 욕구는 충족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충청남도 아동복지서비스의 경우, 중앙정부의 아동복지정책의 기초 및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시설보호 및 요보호아동중심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보육정책에 따른 선별주의적인 보육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2007년도의 아동복지사업은 아동안전 및 권리사업, 가정보호사업, 지역사회아동보호, 아동시설보호 등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주요한 변화는 영유아보육료 지원확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 확대, 아동발달지원체계(CDA)지원 그리고 시설운영관리 강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충청남도는 총 10개의 특수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소득층 영유아간식비 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무상보육료 지원 등이다.

저출산의 문제가 인구고령화와 맞물리면서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며, 결국 보편주의적인 아동복지정책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서구의 복지국가들이 아동과 가족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사회적 투자로서 이해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이재완·최영선, 2006). 미래사회의 주인공인 아동복지정책의 경우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아동 스스로 자기주장을 할 수 없으므로 정치적, 사회적 관심에서 소홀히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이제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양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국가 및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충청남도의 아동복지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발전과제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충청남도 아동복지 현황

1. 아동인구 및 복지에산

2005년 12월 현재, 충청남도 인구는 190만 3천명으로 지난 2000년 187만 9천명에서 1.3%로 증가하였다. 인구구조 변화를 보면 아동인구(0-14세)는 2000년 20.1%에서 2005년 18.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노령인구는 2000년 11.9%에서 14.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유년인구의 감소는 저출산에 기인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2000년에 1.52명에서 2005년에 1.26명으로 감소하였다(이재완, 2006). 따라서 충청남도는 향후 노인인구의 증가와 아동인구의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전국 및 충남 연형별 인구 구성비

(단위: 천명, %)

구분	총인구		아동인구비 (0~14세)		생산가능인구비 (15세~64세)		노령인구비 (65세 이상)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국	충남
1990	42,869	1,992	25.6	24.3	69.3	67.8	5.1	7.9
2000	47,008	1,879	21.1	20.1	71.7	68.0	7.2	11.9
2005	48,294	1,903	19.1	18.8	71.8	66.9	9.1	14.4
2010	49,220	1,984	16.3	16.3	72.8	68.3	10.9	15.5

자료 : 통계청, KOSIS, 2005.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으로 개인주의 가치관 확산과 공동체 가치관 퇴색, 가부장제적 및 남성 중심의 가치관 상존, 경제·사회적 불확실성 증대, 여성의 교육수준·자아욕구·사회참여 증대, 자녀효용가치 감소와 자녀의 질적 양육 증대, 임신·출산 건강수준 악화를 지적할 수 있다.

〈표 2〉 충청남도 사회복지예산현황

(단위: 천원, %)

구분		예산액
합계		373,206,287
일반회계	소계	355,106,287 (100)
	노인	65,250,996 (18.4)
	아동·청소년	81,550,465 (23.0)
	장애인	21,982,023 (6.2)
	여성	3,118,889 (0.9)
	복지행정	603,024 (0.2)
	기초생활	179,626,570 (50.6)
	일반운영비	255,450 (0.1)
	기타·지역복지	2,718,870 (0.1)
특별회계	계	18,100,000
	의료보호	18,100,000

자료 : 충청남도, 2006 예산 자료집(이재완, 2006 재인용)

한편, 충남도의 사회복지예산은 6천6백억원(2006년, 일반 및 특별회계)으로 도 전체예산의 23.8%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복지예산(일반회계) 약3천7백억원중 아동청소년복지예산은 약 8백1십억원으로 전체 23%에 이르고 있다. 충남도의 사회복지예산은 빈곤과 아동청소년, 노인복지 분야의 비중이 크고 타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2. 아동복지시설 현황

충청남도의 아동복지시설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입양기관 1개소, 아동양육시설 14개소, 아동자립지원시설 1개소, 그리고 아동상담소 1개소가 있다. 이러한 시설수는 타광역지자체와 비교할 때 매우 적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그리고 아동직업훈련시설이 전무하여, 이에 대한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아동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아동상담소의 확충이 필요하다. 즉, 요보호아동의 조기발견과 아동의 문제행동을 사정하고 치료하기 위해 필요하다. 특히 아동상담소는 기아, 미아, 가출아동 등의 발견 및 귀가조치하거나, 일시 보호하였다가 아동양육시설로 이송하기 위한 전단계로 아동상담을 활용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다.

〈표 3〉 시·도별 아동복지 시설 현황 비교

(단위: 개소/ 2006.12.31 기준)

구분	아동입양 기관	아동양육 시설	아동자립 지원시설	아동보호 치료시설	아동일시 보호시설	아동직업 훈련시설	아동 상담소
서울	6	33	3	1	7	2	2
부산	2	20	1	1	1	-	3
대구	1	18	2	1	1	1	3
인천	1	8	-	-	-	-	3
광주	2	9	1	-	1	-	4
대전	1	11	1	1	-	-	4
울산	1	1	-	-	-	-	1
경기	2	26	-	-	2	-	7
강원	1	9	-	-	1	-	5
충북	2	13	1	1	-	-	-
충남	1	14	1	-	-	-	1
전북	1	16	1	1	-	-	3
전남	1	21	1	1	-	-	-
경북	1	15	-	-	1	-	-
경남	1	24	1	1	1	-	3
제주	1	5	-	-	-	-	-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07 재구성.

한편 충청남도 시·군별 아동복지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아동복지시설은 16개 시·군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동생활시설이 전무한 지역이 7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이용시설의 경우, 5개 미만의 지역이 9개 지역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지역간 아동복지시설의 차이는 결국 지역별 아동복지수준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간 균형있는 아동복지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표 4〉 충남 시·군별 아동 복지시설 현황(2006년 기준)

(단위: 개소)

구분	계	시							군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
아동생활시설	15	3	-	2	1	-	3	-	2	1	1	-	-	1	1	-	-
아동이용시설 (지역아동센터·수능공부방 등)	100	22	5	2	17	14	9	1	9	3	2	5	1	3	4	3	-

자료: 충남도, 충남도정주요통계.

다음으로 충청남도의 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2007년 6월 현재, 총 1,164개소로 2004년도와 비교하면, 8.4% 증가하였다. 설립주체별 분포를 보면 민간보육시설 60.9%, 가정보육시설 34.3%, 국·공립보육시설 3.3%, 그리고 직장보육시설 1.5%이다.

〈표 5〉 충남 보육시설 현황

(단위: 개소, 명, %)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민간보육시설 법인외	개인	직장보육 시설	가정보육 시설
시설수 (%)	1,164 (100)	38 (3.3)	134 (11.5)	75 (6.4)	498 (43)	17 (1.5)	401 (34.3)
종사자 수 (보육교사)	4,159	193	828	407	1,973	67	690

자료: 충청남도, 충남보육통계 (2007.6.30).

이중에서 2004년도와 비교할 때(〈표 6〉), 국·공립보육시설과 직장보육시설이 각각 22.6%, 21.4%로 증가하였지만 전체보육시설대비 국·공립보육시설 비율은 전국평균(2006년 6월 기준) 5.2%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직장보육시설은 전국평균 0.93보다 높게 나타났다. 충남도의 특수보육시설은 보면 영아전담 49개소, 장애아전담 7개소, 장애이통합 71개소, 방과후전담 4개소, 방과후통합 62개소, 시간연장형 92개소, 휴일보육시설 4개소이다.

한편, 충남지역의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을 보면, 전체 209개 읍·면·동 가운데 동지역에는 보육시설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반면, 42개 읍·면에 보육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충남도의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의 절대적 부족과 시설미설치로 인해 보육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어 시설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표 6〉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증가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2004	2007	증가율
전체		1,074	1,164	8.4
국·공립보육		31	38	22.6
민간보육	법인	116	134	15.5
	법인외	96	75	-21.9
	개인	464	498	7.3
직장보육		14	17	21.4
가정보육		353	401	13.6

자료: 충청남도, 충남보육통계(2004.12/ 2007.6).

3. 아동복지사업현황

아동복지사업은 아동안전 및 권리에 관한 사업, 가정보호사업, 지역사회아동보호, 시설보호로 구분된다(보건복지부, 2007). 그리고 아동에 대한 보육정책은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충청남도 2007년도 아동복지사업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7〉과 같다.

아동안전 및 권리사업은 우리나라가 지난 1991년 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사항으로, 아동이 보호의 대상이자 권리의 완전한 주체로서 인정되어야 함을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하는 것이다. 특히 아동학대, 방임아동 및 실종 등 아동권리의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는 정책으로 2004년 1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체계적인 아동정책추진을 위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동권리의 증진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주요사업(〈표 7〉)은 어린이날 행사,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어린이주간 행사 등이 있다.

가정보호사업은 아동에게 가정을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충청남도의 경우, 그룹 홈,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소년소녀가정지원, 가정위탁양육비 지원 등이다.

지역사회아동보호사업은 퇴소아동자립정착금지원, 아동급식비 지원,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아동급식비 지원, 수능공부방지원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일정액을 적립할 경우 정부에서 월 3만원까지 1:1비율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회 진출시 학자금이나 취업, 창업, 주거마련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동시설보호는 아동복지시설 15개소 운영, 입양기관운영, 퇴소아동자립비 추가지원, 시설아동사회적응 훈련지원 등이 있다.

〈표 7〉 충청남도 아동복지사업

구 분	아동복지사업
아동안전 및 권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85회 어린이날 행사: 1회(공주시) ·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2개소, 지방 이양): 2개소 · 후원자·아동탄남행사: 250여명 · 어려운 아동 수련교실운영: 100여명 · 전국아동복지시설 축구대회참가: 1회 · 어린이주간 행사개최: 1회
가정보호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 홈 형태 아동보호: 7개소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만 12세 이하 국내입양아동 130명 · 입양장려금 지원: 8가구 · 아동이용시설처우개선비(지방 이양): 100명 · 소년소녀가정지원(지방 이양): 100명 · 장애입양아동양육보조금지원: 7명 · 가정위탁 지원센터 운영: 1개소 ·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지방 이양): 800명
지역사회아동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소아동자립정착금지원(지방 이양): 70명 · 아동급식비 지원(지방이양): 14,300명 ·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요보호아동 1,168명 · 어려운 아동 추가지원: 1,580명 · 결연기관 운영(지방 이양): 2개소 ·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운영: 81개소 ·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 11,500명 · 아동복지교사 지원 : 12명 · 저소득층 학생 수능공부방 지원: 15개소
아동시설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시설운영(지방 이양): 15개소 · 입양기관운영(지방 이양): 1개소 · 퇴소아동 자립비 추가지원: 70명 · 시설아동 사회적응 훈련지원: 641명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6개소

자료: 충청남도 내부자료

한편 충청남도의 영유아보육사업은 중앙정부의 보육사업인 영유아보육료 지원확대, 영아(장애아)기본 보조금 지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부육시설 운영비 지원,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참여권장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 충청남도의 특수시책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충청남도 보육 특수시책사업(2007년)

사업명	사업내용
·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	- 저소득층 보육료지원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500원/일, 250일간 지원
· 장애아통합보육(수당/운영비)	- 일반보육시설 중 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에 보육교사 수당지원(1인당/50천원/월), - 시설운영비(1시설당/300천원/월)
· 민간보육시설 법정저소득층 차액보육료지원	- 법정 저소득층 아동 1인당 월 2만원
· 국공립·법인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 보육시설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특수보육시설 운영지원	- 시설당 30만원/월 지원(방과후보육시설 지원대상제외)
· 대체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 보육교사가 출산, 휴가, 결혼, 병가, 보수교육시 대체 인력에 대한 지원
·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 1인당 5만원/월 지원
· 여성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무상보육료 지원	-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의 영유아보육기회제공 (보육료 전액지원)
· 보육두레 운영	- 부모협동시설 1개소 운영비 지원
· 장애인 전담보육시설 장애인차량지원	- 장애인전담시설의 장애인 리프트 차량구입비 지원

자료: 충청남도, 2007년도 보육시행계획.

Ⅲ. 아동복지 발전과제

1. 아동복지의 패러다임 전환

해방이후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은 요보호아동중심의 선택주의적 정책이었다. 이로 인해 그동안의 정책들은 사후예방적인 프로그램으로 아동의 보편적 복지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이제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을 회피하는 지경에 처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에 유래없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였다. 저출산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위험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이에 따른 경제성장의 둔화와 사회부담의 가중 등이다.

이제부터 마음 놓고 출산하고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정책과제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을 국민 모두가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동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즉,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비용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인적자본의 육성을 통한 사회발전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더 이상 아동복지가 빈곤아동, 문제아동, 장애아동 등으로 특징되는 요보호아동의 복지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가 복잡·다양화하게 될수록 아동복지의 욕구와 문제는 고도화·다원화되기 때문에 이제는 예방적 복지,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아동에 대한 모든 사회·경제적 조치들이 아동이익의 최우선의 원칙, 아동생존 및 발달권, 아동참여권 등 아동권리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강구되어야 한다.

2.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간 정책융합과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수립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마련 및 실천에 있어 합리적인 역할분담과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0)을 세웠다. 사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실행하는데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즉, 지방정부 차원의 지역특성에 맞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중앙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충남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차원의 노력에 더하여 지방정부의 역할모색과 협력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표 9〉 범 정부적 저출산 대책

구분	내용	중앙정부	지방정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 영유아보육·교육비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	○	-
	- 방과후 학교 확대	○	○
	- 자녀양육가정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확대	○	-
	- 자녀양육가정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	○
	- 입양아동 양육지원	○	○
	- 보육시설확충	○	○
	-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	○
가족친화, 양성평등 사회문화조성	- 저소득층 산모도우미 파견	○	○
	- 산전후휴가 급여 등 지원 확대	○	-
	- 육아휴직지원 강화	○	-
	- 출산, 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	○
	-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개선	○	○
	- 양성평등, 가족친화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강화	○	○
건전한 미래세대육성	- 친밀하고 평등한 가족생활문화조성	○	○
	-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	○
	- 아동·청소년의 건전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	○	○

자료: 이재완, 저출산·고령화의 영향과 충남의 대응방안, 2006.

3. 아동복지서비스 공급체계의 합리적 조정 및 연계

아동정책은 복지, 보호, 교육, 문화, 체육 등 전 부처에 추진하고 있어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다.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지방정부의 경우, 아동복지사업의 서비스 공급망이 체계적이지 못하여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충청남도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이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으며, 시설들간 긴밀한 협력과 연계없이 분절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방과후 보육(교육)의 실태를 보면,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서 관리하다 보니 지역단위에서는 기능이 유사한 사업들이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표 10〉).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방정부차원의 조정 및 연계협력을 통해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 그리고 통합성을 제고해야 한다.

〈표 10〉 방과 후 보육(교육) 현황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청소년위원회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사업명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공부방	방과후 보육	방과후 학교
대상아동	저소득 초·중·고생	초(4-6년) 중등(1-2년)	저소득 초·중생	초등학생(1-6년)	초·중·고생
기능	학습지도 및 보호,급식 등	특기적성교육, 보충학습, 급식등 종합서비스 제공	학습공간 제공	보육서비스 제공	특기적성교육

4. 아동복지시설의 확충

충청남도 아동복지서비스가 체계화, 전문화,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시설의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아동복지시설현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충청남도는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다양한 시설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아동상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재, 이러한 시설도 1개소에 지나지 않고 있어 아동복지인프라가 빈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역간 차이도 현격히 나타나고 있어 16개 시·군 중 아동이용시설(지역아동센터 등)이 5개미만의 지역이 9개 지역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시설의 경우에도 민간보육시설의 의존율이 높으며, 상대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충청남도는 아동복지시설 확충 계획을 세워 다양한 아동복지수요에 맞는 시설인프라를 충남전지역에 균형있게 설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특수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할 것이며, 기존 시설의 환경개선을 통해 시설이용의 접근성과 쾌적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5. 아동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지자체 및 직능단체 역할 분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정과 지역사회, 그리고 학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아동을 둘러싼 환경(단위)이 아동친화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것이 연계·협력될 수 있도록 서비스 공급주체들간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자체와 직능단체의 역할을 상정할 수 있다.

〈표 11〉 아동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지자체 및 직능단체 역할 분담

구분	참여기관	역할
지방자치단체	충남도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지원시책 개발 지원 - 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 - 공공시설 이용시 할인 혜택부여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지역거점별 아동복지시설 확충(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복지관/ 아동상담소 등) - 아동수당제도 실시 - 임신부 교통비 지원 - 아동인권보장에 관한 홍보 및 의식개선 노력지방의회
지방의회	광역 및 지방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양육환경조성과 아동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재정 지원보전 및
보건 및 의료기관	의사회, 약사회, 보건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임신, 출산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보건·복지연계서비스 강화 - 빈곤아동에 대한 무료건강검진 활동경제단체
경제단체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사)충남벤처협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보육시설 확충 -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적극적 보장 - 출산, 양육친화 우호적 기업문화 조성 - 일, 가정 양립화 촉진 캠페인 등 홍보
언론계	신문사/방송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권리보장 및 사회투자정책 차원의 아동복지 정책 홍보 - 출산, 육아지원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 방송, 보도 등
교육 및 연구기관	교육청/대학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실시 - 보편주의적 아동복지정책 의식교육 - 출산, 양육친화적 학내분위기 조성 - 저출산문제 홍보 - 아동의 안전, 권리보장에 대한 조치 - 지역특성을 반영한 아동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복지계/사회단체	복지시설/사회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문화 조성 - 아동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지역사회 아동복지 캠페인 전개 - (아동)복지기관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

자료 : 충청남도 출산·양육후원협의회, 출범식 및 회의자료 재구성, 2007.

IV. 결론

최근에 아동에 대한 지원을 인적자본에 대한 사회적 투자로 보는 시각으로 아동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은 해방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지역사회보호 또는 가정에서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고려 없이 곧바로 요보호아동에 대한 시설보호가 이루어졌다. 보통 가정에서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이후에 시설보호가 이루어지는 서구복지선진국과는 반대의 길을 걸은 것이다. 물론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가정보호나 지역사회보호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의 순혈주의 의식은 가정위탁보호나 입양제도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 되고 있다. 입양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아동양육에 대한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시설중심의 아동복지서비스는 현재의 분출되는 아동의 복지욕구와 보육문제에 대응할 수 없다.

결국 일반 아동의 보편적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 그리고 '사회가 아이를 함께 키우는 양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의 도래에 대하여 인구폭탄으로 인류에게 사회·경제적 재앙이 될 것이라는 인구학자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급속한 저출산 국가가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사회적 보호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이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 사회의 각 주체들이 아동양육친화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을 해야 한다. 충청남도의 경우, 지역환경에 맞는 아동복지 프로그램 개발 노력(다사랑카드 등)과 함께 보다 근본적으로 가정보호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아동보호 및 시설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연영, 사회투자국가, 새로운 사회복지패러다임인가?,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2007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07.
- 김중해, 보육정책의 쟁점과 과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편, 한국 사회복지의 현실과 선택, 나눔의집, 2007.
- 보건복지부, 2007년 아동복지사업안내, 2007.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2006.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07.
- 이재완, 저출산·고령화의 영향과 충남의 대응 방안, 충남발전연구원,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2006.
- 이재완·최영선, 세계의 아동수당제도, 양서원, 2006.
- 충청남도 출산·양육후원협의회, 출생식 및 회의자료, 2007.
- 충청남도, 2007 도정백서, 2007.
- 충청남도, 2007년도 보육시행계획, 2007.
- 충청남도, 2007년도 주요업무실천계획, 2007.
- 충청남도, 도정주요통계, 각년도.
- 충청남도, 예산서, 2006.
- 충청남도, 제1차 충청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 2006.
- 충청남도, 충남보육통계, 2004.12./2007.6.
-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정책방안 모색, 2006.
-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충남 보육정책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2005.
-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2005.
- Esping-Andersen, G.,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Oxford: Oxford Univ. Press, 2002.